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p>12월 30일(수) 조간(12.29 12:00 이후 보도)</p>	
배 포 일	2020. 12. 29. / (총 5매)	담당부서	아동학대대응과
과 장	박 은 정	전 화	044-202-3380
담 당 자	배 태 현		044-202-3381

중앙지방이 함께 아동학대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
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개월,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개최
- 경상권을 시작으로, 서울, 인천·경기·강원, 부산·울산, 충청권, 전라권 등 지속 진행 계획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, 중앙과 지방의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12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

○ 이번 회의는 대구·경북·경남 지역의 총 19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첫 회의로, 앞으로 총 5회의 권역별 회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* 서울/인천·경기·강원/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/광주·전북·전남/부산·울산(순서·일정 미정)

<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추진 경과>

- ① (법개정)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('20.4. 시행)
* '23년 9월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가능
- ② ('20년 배치) 선도지역 118개 시군구에 총 290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
- '20.9~12, 총 4회에 걸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실시(기수별 2주 교육)
- ③ ('21년 배치) '21년 229개 시군구 및 5개 시도에 총 374명 기준인건비 추가 배정하여 모든 시군구에 총 664명 배치 계획

□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의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전담인력 처우 개선, 인프라 지원, 지역 유관 자원 연계 체계 구축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,

○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각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또한 그간 시군구 현장 방문(10.28~11.6)·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담회(12.7) 등으로 수렴한 현장 상황 및 전담공무원의 업무 건의사항을 시군구 부단체장과 공유하고, 애로사항*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* 보호시설 확충, 전문 인력의 배치, 교육 강화, 조사업무 인프라 지원 등 필요

□ 1차 회의에 참석한 대구·경북·경남 지역의 경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치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돋보였다.

○ 특히 대구 달서구와 경북 포항시, 경남 진주시, 창원시, 사천시 등은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'20~'21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자체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.

* △(달서구) 배정 8명→배치 10명, △(포항시) 배정 7명→배치 9명, △(진주시) 배정 1명→배치 2명, △(창원시) 배정 6명→배치 7명, △(사천시) 배정1명→배치2명

○ 대구 달성군, 경북 칠곡군 등은 2021년 1월 내에 전담공무원의 배치를 모두 완료*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*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는 2021년 10월까지 가능

□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당직·비상근무 제외, 특정업무 경비를 편성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 곳도 눈에 띄었다.

- ✓ (특정업무경비 편성) 경북 경주시, 영천시, 대구 달서구, 경남 합천시 등은 아동학대 조사업무 대상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하여 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
- ✓ (현업공무원 지정) 대구 달서구, 달성군, 경북 포항시 등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
- ✓ (당직·비상근무 제외) 경남 김해시, 창원시 등 대다수 시군구에서는 시군구 내 당직·비상근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제외

□ 일부 시군구에서는 전담공무원 업무 휴대폰, 학대조사 과정의 아동 치료비 등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✓ (휴대폰) 대구 달서구 8대, 경북 포항시 4대(1월 중)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필요 물량을 확보 중
- ✓ (치료비) 대구 달서구, 달성군, 경북 포항시, 경주시, 구미시, 칠곡군, 경남 거제시, 남해시, 합천시 등 아동 치료비 예산 확보

- 다만, 업무 차량은 자차를 이용하거나 일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지자체도 있어, 국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며,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24시간 대응 등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 신고에 있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많았다.

□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“지난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, 불철주야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”라며, “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업무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”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, “앞으로 6개 권역별 영상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지자체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, 보건복지부도 업무 여건 개선을 세심히 지원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참고1 대구·경북·경남 지역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계획(안)

1. 회의 개요

- 목적 :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,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 도모
 - 일시 : '20.12.30(수), 14:00 ~ 15:00(약 60분) ※ 1차 회의
 - 장소 : 보건복지부 본관 7층 영상회의실(704호)
 - 참석자 : 복지부, 시도 담당 국장, 시군구 부단체장
 - (복지부) 제1차관, 인구아동정책관, 아동학대대응과장 등
 - (시도) 아동학대 관련 담당 국장
 - (시군구) 대구(2), 경북(7), 경남(10) 19개 시군구* 부단체장
- * '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선도지역 대상

2. 영상회의 주요 내용

구분	시간/ 장소	주요내용	비고
인사 말씀	14:00~14:05 (5')	인사말씀	보건복지부 제1차관
업무 보고	14:05~14:15 (10')	시군구 협조 요청 사항 설명	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
	14:15~14:45 (30')	협조 사항 추진 현황 및 모범 사례 발표 ※ 6분씩 5개 시군구 발표 (대구 달서구, 경북 포항시, 구미시, 경남 창원시, 김해시)	시군구
간담회	14:45~15:00 (15')	현장 애로사항·건의사항 청취	복지부, 시도, 시군구

3. 향후 계획

- 1차 회의(12.30) 이후 권역별* 영상회의 회의 진행(~'21.1)
- * 서울/인천·경기·강원/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/광주·전북·전남/부산·울산(순서·일정 미정)

참고2

아동학대 대응 관련 '21년 달라지는 사항

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모든 시군구에 배치, 교육 강화

- '20년 118개 시군구에 290명 배치 → '21년 229개 시군구 및 5개 시도에 총 664명 배치(374명 기준인건비 추가 확보, 제주 별도)
- * 법정 의무배치 시기('22년)보다 1년을 앞당겨 전 지자체 인력 확보
- 전담공무원-아동보호전문기관-경찰 합동 업무교육 신설, 기배치 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등 교육 강화

2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

- 아동보호전문기관 '20년 71개 → '21년 81개로 확대
- 학대피해아동쉼터 '20년 76개 → '21년 91개로 확대

3 아동학대 대응 예산

- '21년 예산 416억원으로, '20년 본예산 297억원 대비 40.2% 증가

< 아동학대 관련 예산 주요 증액 내용 >

- ✓ (학대피해아동쉼터) 인건비 4.9% 인상(1,132백만원↑), 15개소 신규 설치 등(1,990백만원↑)
- ✓ (아동보호전문기관) 인건비 4.9% 인상(2,910백만원↑), 10개소 신규 설치(3,000백만원↑)
- ✓ 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(350백만원↑), '21년 배치 시군구에 상담조사시설 구축(1,110백만원↑)
- ✓ (e아동행복지원시스템)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 활용해 학대 위기아동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굴 예측률 제고 등(1,412백만원↑)

4 즉각분리제도 도입 등 아동복지법 개정

-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,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,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 가능(아동복지법 제15조, 3월 말 시행)
-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,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 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(아동복지법 제75조, 6월 시행)